

구윤철 “美, 3500억弗 선불 요구 사실… 트럼프 설득 관건”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美 베선트 재무장관 입장변화 기류
러트닉 상무장관과 논의 가능성
대출·보증 긴 형식이 가장 현실적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상대측은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실무진이 입장을 선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반면, 결국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우리 측 협상단은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선불)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선불 형식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저 특유의 수사로 여겨졌으나 선불 요구가 실제 확인됐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양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

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의 방식인데 최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G20(주요 20개국)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여러 번 만

났다”며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걸 베선트 장관도 안다”며 “(베선트가)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얘기했을 걸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베선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맡고 있다.

우리 측이 베선트-러트닉 팀을 설득한 다 해도 최종 관문 백악관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의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 및 원화 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얘인지 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환 안정성이 담보되면 투자에 걸림돌이 없다는 질문에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 하느냐,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출·보증을 긴 대미투자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미,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APEC 정상회의 ‘분수령’

김용범 정책실장, 美 일정 마치고 귀국
러트닉 장관과 펀드 운용방식 조율
美 대두 수입,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장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시스

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

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

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파행 속출’ 국정감사… 금주도 법사위·국토위서 공방 예정

與野, 지귀연 판사 공정성 의혹과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대립 전망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2주차 국정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1주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관례상 이석하는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은 뒤 여당 의원이 일방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치러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총 37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강훈식 비서실장, ‘K-방산’ 특사로 유럽행

독일·폴란드 등 방산 협력국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날 낮 12시25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한 우리

나라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는 현재 총 562억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 차원에서 알리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들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임명 이틀 만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에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서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